**주간통일정세 2009-17**(2009.04.20~04.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17

##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Ⅰ.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김정일, 로켓 발사 관계자 만나 사진촬영(4/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광명성2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적 경사이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날 면담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리영호 군 총참모장,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

**김정일, 軍선전대 공연 관람(4/21,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10215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을 마친 뒤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 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노동당 부장, 최익규 선전선동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수행

**北김정운, 후계수업 시작(4/26,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으로 전해진 셋째 아들 정운이 최근 국방위원회의 말단 직책인 '지도원'으로 후계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한 대북 소식통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가 열리기 며칠전 김정운에게 국방위원회 지도원 직책이 부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다른 대북 소식통도 같은 소식을 전했으나 "정운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개

## 나. 정치 관련

### ○ 北, 우주기술력 존재가치 시위할 것(4/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확고한 자주적 입장과 배짱, 과학기술 위력의 승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우리의 우주개발 기술력은 앞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생활력을 뚜렷이 시위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가 "위인송가로 지구를 덮으며 자기의 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돌고 있다"며 "'광명성 2호'로부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470㎒로 지구상에 쉬임없이 전송되고 있다"고 주장

### ○ 민주조선, 신해철 고발 비난(4/26,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이 26일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발작증'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 보수단체들이 '북한 로켓발사 성공 경축' 글을 쓴 가수 신해철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동족 대결에 환장한 자들이 일으키는 또 하나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민주조선은 "가수 신해철이 우리의 위성발사 성공을 두고 한 핏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기쁨을 담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 ○ 천리마제강 연구사에 영웅칭호 수여(4/25,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23일 '정령'을 통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연구사 리재경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정령은 리 연구사가 "우리식의 현대적인 초고전력전기로 설계를 훌륭히 완성해 나라의 흑색금속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여 배경을 설명

### ○ 北, 자위적 국방노선 고수(4/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조선(북한)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들고 나가고 있는 노선"이라고 강조, 통신은 핵무기를 시사하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사회주의도 지킬 수 없으며 강성대국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라며 현재 북한이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마음 먹은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통신은 이같은 성과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은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 北, 南 의장성명 연관…분별있게 처신하라(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는 남측 당국의 "불순한 책동"이 연관돼 있다며 남측 당국이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이에 대처해 우리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이명박 패당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할 것이고 반민족적 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 말것"이라고 주장하고, 남측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무게있게 새겨듣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

### ○ 北, 군창건일 맞아 '선군정치' 찬양 주력(4/24, 4/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 언론은 군창건 기념일 전날인 24일 김 위원장이 '광명성2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만나 "광명성2호 발사를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일제히 반복 보도하면서 경축 분위기를 고조.
- 또 북한은 이날 4.25문화회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열었으며, 리 총참모장은 남한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적하면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25일 북한 각지의 군인과 주민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 등과 지역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 헌화하는 행사를 가졌고 평양과 지방의 주요 극장들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업적"을 찬양하는 경축공연이 열림.
- 노동신문은 기념사설에서 군인과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주위에 굳게 뭉치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한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전개해 나가자고 역설

### ○ 北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4/25,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 그는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14일부터 외무성 성명으로 선언한 데 따라 우리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설명
- 외무성 대변인은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

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재처리를 통해 확보되는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함.

### 北, 이란 미국 기자 실형 보도(4/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이란이 최근 재판에서 미국 기자에게 간첩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보도, 방송은 이날 "이란이 18일 지난 1월에 체포된 미국 기자에게 8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했다"며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이란에서 기자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기자활동 자격을 박탈당한 그는 그 후에도 비법적으로 이란에 체류하면서 미국 정탐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감행했다 한다"고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

### 北, 안보리 제재 철저히 배격 반발(4/24, 연합)

- 북한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기업 3곳을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며 반발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안보리 제재위가 제재 대상 기업 선정에 합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박 대사는 또 "최근 안보리 활동 영역을 보면 안보리가 민주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안보리를 비난

### 北리영호, 억제력 강화, 강경대응조치 취할 것(4/24, 연합)

- 북한군 리영호 총참모장은 24일 남한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적하면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날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미국의 호전세력과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
- 그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은 우리 조국을 경제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워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투쟁"이라며 "전체 당원과 군인, 인민들은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
-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

○ **조선신보 '北 핵시험' 가능성 시사(4/24, 연합)**

- 조선신보가 24일 '6자구도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에 따라 북한이 핵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시사, 조선신보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조선(북한)을 핵시험에로 떠밀었던 선행 정권(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북한)군대의 경계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외교적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 **北, IMF활성화는 금융지배 강화 의도(4/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실속이 없는 겉치레식 회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대해 서방 열강들이 "리속(잇속)만을 채우려"한 회의이며 합의 내용은 "대부분 빈껍데기"라고 평가절하. 노동신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회의의 성과를 찬양하지만 발전도상국들은 회의 결과를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2009년 식량 178만t 유입 필요(4/25, 식량농업기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수확 전망과 식량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양곡년도(2008.11~2009.10)상 식량 유입 필요량이 178만6천t에 달한다고 소개, 25일 FAO 법인 문서 보관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4월 2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 양곡년도상 지난 3월말 현재 외부에서 들여온 식량은 모두 20만3천500t에 불과
- 이중 상업적으로 수입한 양은 2만600t이고 외부에서 식량원조로 할당되거나 운송된 양은 18만2천900t 이었음.
- 북한은 지난해 양곡년도상 상업적 수입 73만8천100t에 원조 76만200t으로 모두 149만8천300t을 외부로부터 들여왔음. 보고서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절실한 32개국 가운데 포함시키면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외부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4월부터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안보리, 對北제재 기업 3곳 선정(4/24,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 이날 제재위에서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임.
-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 금지되

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을 최신화(업데이트)했다"며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 대상 품목도 추가

-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주요 수출기관' 혐의로, 단천상업은행은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조, 조립 관련 물품 거래 담당' 혐의로 이미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안보리의 선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의 제재는 국제적으로 확대됨.
- 안보리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한 1718호 결의에서 무기 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대상을 이후 선정하지 않았음. 안보리 제재위는 제재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각각 11곳과 14곳씩 제출한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상 기업 수가 3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짐.

### ○ 北대동강에 6개 발전소, 총출력 26만9천kW (4/19, 노동신문)

- 북한의 대동강에는 모두 6개의 발전소가 건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의 총출력은 26만9천kW라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
- 신문은 평안남도 대동강 상류지역에 최근 완공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것으로 지난 18일 보도된 영원발전소를 소개하면서 대동강에는 영원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등 2개의 언제(댐)발전소와 미림, 봉화, 성천, 순청 등 4개의 갑문발전소가 있다고 설명

### ○ 러-北-中 국제철도 올해 개통(4/22, 리아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와 북한,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22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극동 하바로프스크 현지 신문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공사(RZD) 자회사인 '제일화물'과 중국 현지 무역 회사가 최근 철도운송협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북한은 내달 서명할 예정임. 총연장 126km인 이 철도는 두만강 하류의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역을 거쳐 러시아 하산까지 연결됨.

### ○ 北, 내각 전원회의 개최(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회의에는 내각 상들이 참석했으며 각 성의 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각도의 농촌경리위원장과 지구계획위원장, 지방공업관리국장,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이 방청

- 전원회의에서는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총화와 2분기 인민경제계획 실행대책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된 올해 국가예산집행을 위한 내각결정채택에 대하여'를 논의

**北, 신생 간석지도 사탕수수 재배에 활용(4/20, 조선중앙통신)**

-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새로 개간해 아직 염분이 많은 간석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사탕수수 종자를 최근 개발, 재배하는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통신은 "지난 시기에는 간석지를 새로 개간하면 염기 성분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아무런 작물도 심지 못하고 묵여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온천군은 과학자들과 함께 "새로 개간되는 간석지 조건에 맞는 작물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킨 끝에 "생산성이 높고 실정에도 맞는 새로운 사탕수수 종자를 얻어내어 현실에 도입"했다고 설명

**北학술지, "남는 노력" 활용 강조(2009년 1호, 경제연구)**

- 북한의 계간 '경제연구' 2009년 1호는 '남는 노력 동원 이용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공장·기업소에서 '남는 노력'을 등한시하면 "건달을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며 노동행정 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이 학술지는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공장·기업소들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남는 노력이 적지 않게 조성"되고 있다며 "노동행정부문 앞에는 남는 노력을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노력낭비를 없애고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
- '남는 노력'이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동생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노력"이라고 학술지는 설명

## 라. 군사 관련

**北, 핵무기 탄두화·중거리미사일 장착 가능(4/24, 더타임스)**

-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작게 만드는데 이미 성공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핵탄두를 '스커드'나 '노동'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라고 더 타임스가 2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턴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핵무기 탄두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핑크스턴 수석연구원은 '스커드' 미사일이 한국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고 '노동' 미사일이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다

며 이 미사일들 중 일부를 탐지하기 어려운 점도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

## 마. 사회·문화 관련

### ○ 北 인민대학습당 전산화 막바지(4/24, 조선신보)

- 북한이 2006년 6월 시작한 국립도서관격인 인민대학습당의 전산화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중이며, 이를 북한 전역의 도서관들과 통신망으로 연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인민대학습당의 홍현문(58) 부총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인민대학습당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 北, 지적재산권 철저히 보호·장려(4/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26)을 앞두고 북한에서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통신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을 채택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주고 "발명권,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현실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상표, 원산지명, 공업도안의 보호를 위한 법들도 채택해 "모든 단위들에서 상표, 원산지명 등록의 신청과 심의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경제 발전과 생산 증가에 맞춰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유도
- 북한 국가품질감독국 최치호 처장은 "최근년간 지적소유권 부문의 법, 규정들을 새로 제정·공포하고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 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

### ○ 北 시장통제 심해져 주민불만 고조(4/22, 연합; 오늘의 북한소식 제275호)

- '오늘의 북한소식'은 제275호에서 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 청진시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금지 물품을 규정한 '2월

17일 방침'을 지난 10일 여성 상인들에게 전달하고 "판매 금지된 상품을 시장에 내다팔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

- 소식지는 "각 구역에서는 선전비서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 방송차를 세워놓고 이 방침을 선전했다"면서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사회주의를 조성시키는 행위'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장사 금지 물품은 서로 약속을 정한 뒤 장마당 밖에서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으며 방문판매도 늘고 있다고 소식지는 소개, 또 상인이 금지 품목을 판매한다는 표지를 들고 있으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상인의 집까지 따라가 매매하는 형태도 있다고 소식지는 설명
- 또 함흥시는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북한 시장에선 수입상품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국 상품은 일절 사고팔 수 없게 돼 있다"며 "만약 팔다가 걸리면 몰수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소개

### 北, 오진우 모델 영화로 군간부 충성심 교양(4/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가 지난 1995년 사망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을 "원형"으로 만든 예술영화 '백옥' 1,2부의 시사회가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이 영화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투사 오진우를 원형으로 하여 혁명의 영도자를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신 전사의 투철하고 진실한 사상정신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 전 부장의 생전에 "혁명전사의 양심과 의리는 티없이 맑고 깨끗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 흰옷 차림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같은 차림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일화를 소개

### 北송암소고기, 외국인들에게 인기(3/21, 조선신보)

- 평양의 '송암소고기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호평받으며 '평양소고기'로 유명해졌다고 조선신보가 21일 소개
- 평양시 대동강구역 릉라동에 있는 이 판매소는 2006년 개업한 이래 "국산 소고기의 고유한 맛과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의 하나"라고 신문은 보도, 평남 개천군에 있는 송암소목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이곳의 쇠고기는 "선도가 좋고 살이 연하고 만문(만만하고 무름)하며 감칠맛이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재제 관련

○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北 핵보유국 간주해야(4/20, 연합)**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IAEA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을 포함,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몇 달내 주요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상황 만족스럽지 않다(4/26, 폭스뉴스)**

-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확산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불량 정권(rogue regime)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그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순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비밀리에 핵확산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6자회담 참가국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최근 유엔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

○ **클린턴, 北 의무이행·대화재개 기대(4/25, 연합)**

- 이라크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호시야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자신들이 맡은 의무로 되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의무와 관련한 대화를 북한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

### 조선신보, 美와 협상의지 우회 표명(4/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협상 재개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배제입장을 시사
-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관련, "각국이 찬성한 문건에는 '로켓'이라는 단어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저 '조선의 발사를 비난한다'는 구절만이 있다"며 "주권국가의 우주계획을 문제시한 전대미문의 성명은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반영한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라고 지적
- 조선신보는 의장성명의 "더 이상 그 어떤 발사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 문구에 대해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할 줄 모르는 조선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며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그 무슨 발사를 보류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를 통한 신뢰조성의 과정에만 가능하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을 거론
- 신문은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가 이뤄질 경우 논점은 미사일이라는 개별의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파탄된 비핵화 과정을 되살려내는 것이 초미의 문제"라고 지적

### 보즈워스, 탈북자 면담 예정(4/25, 미국의소리방송)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특별대표 임명 후 처음으로 오는 27일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7일 오후 국무부에서 '제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중인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

### 美국무부, 北에 여기자 석방 촉구(4/24, 연합)

-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24일 북한 당국에 계속해서 이들 여기자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국무부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시 북한 방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기자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가 지난달 30일 이들을 잠시 접견했으며, 가능한 한 조용하게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北, 미국 기자들 재판 회부(4/24, 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

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힘.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죄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 앞서 3월 31일 중앙통신은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음.
-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클린턴, 北비핵화 예산은 '작은 투자'(4/23,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가정해 신청한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외교 분야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 예산의 목적은 (핵 문제와 같은) 특정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구

## 다. 북·중 관계

**○ 北외무상, 베이징 방문(4/25, 아사히 신문;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 신문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을 북한이 거부한데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핵개발 재개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측은 박 외무상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 中, 북핵 해결위해 美에 더 큰 역할 기대(4/23, 미국의 소리방송)**

-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몬트레이국제대학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연구센터의 유안징동 박사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

**○ 中, 北 6자회담 복귀위해 중재(4/23,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북한의 공동 우방과 인접국으로서 남북 관계개선과 협력

이 한반도 전체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힘.

## 라. 북·러 관계

**○ 러시아어센터 개관식 개최(4/24,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어센터 개관식이 24일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관식에는 북측에서 김용진 교육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이, 러시아측에서는 방북중이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대사가 참석

**○ 러 외무장관, 6자, 각각 의무 이행 강조(4/24, 연합)**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한·러 외무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목표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를 모든 관련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꼭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방한에 앞서 북한을 1박2일간 방문했던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은 당장은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없다"면서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뒤 북한측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

**○ 北, 러측에 "6자회담 불필요" 재확인(4/24, 북한 외무성)**

- 박의춘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정세'를 논의,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러시아측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24일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히고 라브로프 장관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고 설명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이 그를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러 대통령, 北김정일에 친서 보내(4/24, 조선중앙통신)**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통신은 2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친서의 구

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라브로프 장관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북한 것으로 미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음.

**北-러, 외교장관 회담(4/2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방북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정부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환영해 연회를 열었으며, 양측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양국간 친선협력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밝힘.

**北-러, 문화·과학 교류계획서 조인(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23일 평양에서 양국 간 2009~2010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와 관계부문 일꾼이, 러시아 측에서 이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일행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가

**러 외무차관, 北 6자회담에 잔류하기를(4/22,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 틀 안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2일 이타르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협상 채널(6자회담)'에 남을 있다고 본다"라며 즉각적인 회담 복귀를 촉구

## 마. 북·일 관계

**北교육성 대변인, 日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비난(4/24, 연합)**

- 북한 교육성은 24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심사에서 합격시킨 데 대해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
- 교육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야말로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국가범죄"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이 감히 저들의 침략과 식민지통치가 '부드럽고 공평했다'느니,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느니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뻔뻔스럽고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주장

**北, 日 일제 납치문제부터 해결해야(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일본은 제 할 바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를 주도한 것을 가리켜 “일본이 그 누구의 납치문제와 인권문제를 꺼내들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분노는 더욱 격증되고 있다”며 일제시대 강제연행 등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日 방위차관, 北 로켓 낙하물 회수 곤란(4/20, 연합)**

- 마스다 고헤이(增田好平)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20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낙하물 회수와 관련, “낙하지점 확인되지 않았다. 회수와 관련한 기술적인 곤란성 등을 전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힘.

바. 기타외교 관계

**北외무상, 비동맹회의 참석차 쿠바行(4/25,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쿠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장관급회의 참석차 25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또 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으로 쿠바와 일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으나 방문 국가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北주재 유럽국 대사 ‘태양절’ 행사 대거불참(4/22, 연합)**

-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7개 유럽 국가의 대사들 중 대부분이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22일 밝힘. 이런 유럽 외교관들의 움직임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설명

## 3. 대남정세

**南北 당국자 접촉 22분만에 종료(4/21, 연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 간 접촉이 21일 개성공단 내 북측 관할 건물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열림. 이날 저녁 8시35분부터 8시57분까지 22분 동안 진행된 접촉에서 북한은 우리측에 3월 30일부터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조사 결과와 신병 처리 문제, 개성공단의 향후 운영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음.
- 접촉에 앞서 남북 양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7차례의 예비 접촉(연락관 접촉)을 거듭하며 의제와 장소 등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거듭, 남측은 오전 예비접촉에서 당국자 간 본 접촉을 남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

회에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자기 건물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3월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통보, 이날 남북접촉이 이뤄짐.

## 첨부1 〈북측 통지문 요약 전문〉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과 모략소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악의에 차서 걸고 끌다 못해 국제적인 제재놀음에 앞장서서 날뛰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의 전면참가를 떠들며 북남관계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철거 이설비도 안 되는 헐값으로 남측에 내주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을 낮게 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현 남측 당국이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남측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좋게 발전해온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지금 남측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는 근 4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로 3천만 달러(연간)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만이 손해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계약에 구속돼 있을 수 없으므로 땅값도 올리고 노동력 값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1단계 하부구조 건설이 끝나고 여기에 100여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을 예약한 기업들도 많은 조건에서 이제는 현실에 부합되게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만은 계속 유지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반면에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진심에 대해 돈에 목이 매어 공업지구를 폐지 못하고 있는 듯이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의 표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상 '북측 통지문 요약' 끝.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붙어 있다)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당면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함.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함.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임.

주체 98년 4월 21일

◎ 북한연구센터 제공

# Ⅱ.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린턴 "北 상황 만족스럽지 않다"(4/2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 또는 핵무기 제조 기술을 확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으로 미뤄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음.
-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확산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불량 정권(rogue regime)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 그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음. 그는 "북한이 순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비밀리에 핵확산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 참가국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최근 유엔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음.

**○ 클린턴 "北 의무이행·대화재개 기대"(4/2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의무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 재개를 기대했음. 이라크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호시야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자신들이 맡은 의무로 되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 의무와 관련한 대화를 북한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제위원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유엔이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 매우 기쁘다"고 답했음.
-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발표를 비난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메건 맷슨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

고 밝혔음. 그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기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북한이 되돌아오도록 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미국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음.

- 한편 클린턴 장관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더라도 결코 이라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그는 미군 철수는 책임감있고 신중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라크 보안군 강화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北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4/25)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그는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14일부 외무성 성명으로 선언한 데 따라 우리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음. 북한은 지난 14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으로 6자회담 합의가 무력화됐다면서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었음. 영변 핵시설은 불능화 작업으로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우선 그동안 보관해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외무성 대변인은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재처리를 통해 확보되는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북한은 지난 23일 방북한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6자회담 불참을 재확인한데 이어 폐연료봉 재처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당분간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또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장관급회의 참석차 쿠바를 방문하는 길에 25일 베이징에 들러 중국측 고위 관리들과 만나 폐연료봉 재처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6자회담 거부, 핵가동 재개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기사에서 2006년 7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 3개월만인 그해 10월 지하 핵시험을 실시한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더 확고한 것으로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제2차 핵시험 가능성을 시사했음.

### 北, 안보리 제재 "철저히 배격" 반발(4/25)

- 북한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기업 3곳을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며 반발했음.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안보리 제재위가 제재 대상 기업 선정에 합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박 대사는 "우주 이용권 문제를 놓고 안보리가 제재 논의를 하는데 이 자체가 유엔 헌장과 우주 관련 협약들에 대한 완전한 도전이자 철저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은 모든 나라가 갖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며 인공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주장을 강조했음.
- 박 대사는 또 "최근 안보리 활동 영역을 보면 안보리가 민주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안보리를 비난했음.

### 안보리, 對北제재 기업 3곳 선정(4/2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음.
- 이날 제재위에서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임.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이들 3곳을 선정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
- 얼킨 대사는 또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 금지되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을 최신화(업데이트)했다"며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 대상 품목도 추가됐음. 안보리 제재위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재위의 이 같은 합의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게 됐음.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함.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주요 수출기관' 혐의로, 단천상업은행은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조, 조립 관련 물품 거래 담당' 혐의로 이미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안보리의 선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의 제재

는 국제적으로 확대되게 됐음.

- 안보리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한 1718호 결의에서 무기 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대상을 이후 선정하지 않았었음. 안보리 제재위는 제재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각각 11곳과 14곳씩 제출한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상 기업 수가 3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24일까지 안보리 산하 제재위가 대북 제재리스트를 만들도록 했음. 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안보리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했음.

### 러 "대북제재 비건설적"..6자재개 촉구(4/2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오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참가 거부를 선언한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한의 로켓 발사 대책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음.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6자회담 거부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음.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건설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주장, 유 장관과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음.
- 방한에 앞서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던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당장은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없다"면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목표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6자회담 재개방안과 관련,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를 모든 관련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꼭 실현해야 한다"면서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뒤 북한측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음.
- 유 장관은 "6자회담과 관련된 최근 북한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채택한) 의장성명 이행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대북제재는 비건설적"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뒤 "안보리 의장성명을 보면 제재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지금 뉴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제재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밝혔음. 그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 각 관련국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웃나라에서 앞으로 핵을 보유해

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북한측 인사들과) 면담할 때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대해 언급했다"며 한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위성발사를 추진하는 것처럼 "북한도 앞으로 우리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그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문제와 관련,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인도주의적 문제와 6자회담 재개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북한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가스 개발사업에 대해 "현상황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그 대신 연해주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

### 北, 러측에 "6자회담 불필요" 재확인(4/24)

-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정세'를 논의,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러시아측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24일 밝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히고 라브로프 장관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고 설명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이 그를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은 2004년 7월엔 방북한 라브로프 장관을 면담하는 등 2002-2004년 방북한 러시아 외교장관이나 차관을 만나 이번에도 면담 가능성이 제기됐었음.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과 면담을 회피한 것은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비타협적' 공세의 일환이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때문일 것으로 보임.
-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측은 "6자회담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우리(북)의 입장에 유의하였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밝혀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임. 양측은 또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 합의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덧붙였음.
- 그는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이번 방북이 지난해 말 북·러 외무성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올해 북·러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60돌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교류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러시아 이타르타스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무상과 회담한 뒤 북한 핵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함. 우리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측과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문제에 관해선 북한과 러시아 양측 모두 공개 언급하지 않고 있음.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24일 특별기편으로 서울을 방문해 1박2일간 체류할 예정임.

### "보즈워스, 곧 6자회담국들 순방"<美관리>(4/2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밝힘.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이 고위관리는 정확한 날짜나 장소를 밝힐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보즈워스 대표가 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함.
- 이 고위관리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문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 "中, 북핵 해결위해 美에 더큰 역할 기대"(4/23)

-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몬트레이국제대학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연구센터의 유안징동 박사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함. VOA에 따르면 유안 박사는 21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참여'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은 북핵 협상 등의 진전을 위해 북한을 압박할 만한 지렛대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중 관계는 어린아이를 다루는 부모에 비유해 생각할 수 있다"며 "버릇없는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한 대규모 난민의 중국내 유입 등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중국은 보다 현실적으로는 대북 영향력 강화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북한의 핵활동 중단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계속할 만큼 충분한 핵 물질을 보존한다면 경제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따라서 "핵 포기는 결국 북한이 모든 안보와 우려 사안들이 해결됐다고 확신할 때만 가능하며 이는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유안 박사는 강조함.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의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음.

### "中, 北 6자회담 복귀위해 중재 나설듯"(4/23)

- 중국은 북한이 결국에는 북핵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중재 노력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23일 중국은 남·북한간의 접촉 결과와 북·미간 물밑 대화를 지켜본 후 적당한 시점이 되면 특사를 북한에 파견,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함.
- 중국은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철수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공식 선언한만큼 공식 회담 재개에 합의하는 데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이와 관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북한의 공동 우방과 인접국으로서 남북 관계개선과 협력이 한반도 전체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힘.
- 장위 대변인은 남북 접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쌍방이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함.

### 올브라이트 "北 6자회담 복귀시켜야"(4/23)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어떻게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야 할 시기"라고 밝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1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퍼스트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을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함.
-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또 지난 2000년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당시 이뤄진 협상 결과를 깨버렸다고 비판함.
-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북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과 보상 문제를 두고 상당한 물밑 의견접근이 있었으며, 퇴임을 앞둔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방북을 막판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짐. 그는 "현직에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이 핵 무기를 한두 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매우 비싼 대가의 파기가 돼 버렸다"고 주장함.

### 러' 외무차관 "北 6자회담에 잔류하기를"(4/22)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 틀 안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함.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2일 이타르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협상 채널(6자회담)'에 남을 있다고 본다"라며 즉각적인 회담 복귀를 촉구함.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이후 북한이

6자회담 거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추방,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은 북한을 협상 채널에 잔류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힘. 그는 이어 "이란과 북한의 사례는 우리가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라며 "핵 비확산과 무기 통제는 미-러시아 양자 대화의 주요 이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함.

- 러시아는 대(對)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온 6자회담이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태로 폐기되거나 새로운 협상 채널이 생겨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 북한에 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한편,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6자회담 관련국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북 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와 만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북핵 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 방문 후 곧바로 24일 서울을 방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2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임.

### 외신 "남북접촉 22분만에 종료" 타전(4/21)

- 21일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이뤄진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이 끝난 뒤 주요 외신들은 "14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 22분 만에 종료됐다"고 접촉 결과를 일제히 보도함. AP통신은 이날 장소 문제 등으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남북이 어렵사리 대면했으나 개성공단 운영 등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22분만에 협상이 끝났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함.
- 통신은 또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이번 만남은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간 첫 대화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음. 특히 남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은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AFP 통신과 교도 통신, 블룸버그, dpa통신 등도 1년여 만에 남북 당국자 사이에 첫 공식 협상이 열렸지만 절차 문제로 12시간 이상 지체되더니 결국 22분 만에 협상이 끝났다고 우리 정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음.

### 엘바라데이 "북한 핵보유국 간주해야"(4/20)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IAEA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함.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을 포함,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함. 엘바라데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견해를 뛰어넘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인정한 것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몇 달내 주요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따라서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과 해결책 마련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미간 새로운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힘. 그는 "근래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이 후퇴라는 점에 실망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대결이 아닌 건설적인 공동의 토대를 지향하는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함.

### 中 "북한과 핵에너지 협력 안했다"(4/20)

- 중국은 20일 핵에너지 개발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형태의 협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힘. 왕이런(王毅韧)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비서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21세기 원자력장관급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함.
- 왕 비서장은 이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각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함.

### IAEA 총장 "北사찰, 한·중·미가 풀어야"

- 베이징을 방문중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한국·미국·중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함.
- 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엘바라데이 총장과 단독으로 만나 북한의 IAEA 핵 사찰단 추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히고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는 6자 회담밖에 없기 때문에 한·중·미가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의 영변 핵 원자로 재가동과 관련,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북한이 조만간 핵시설 재가동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임.

### ○ IAEA "北, 몇달내 핵시설 재가동"(4/20)

- 북한이 향후 수개월 내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20일 밝힘. IAEA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시설을 얼마나 빨리 재가동할 수 있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몇 달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고 답함.
- 그는 "어느 정도 대립국면을 거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돼 IAEA(감시요원)도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을 이었음.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멈추기 위한 오랜 과정에서 많은 '실수'(mismanaging)가 있었다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접근법에 낙관적인 입장이고, 그 접근법은 대립이 아닌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힘을 쓰거나 불필요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이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보여준 개방성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협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한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 친구들에게 (미국의 유화적 입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며 미국이 최근 이란 핵문제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음.

## 나. 미·북 관계

### ○ 北대변 조선신보, 美와 협상의지 우회 표명(4/26)

-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북한의 대미 협상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협상 재개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배제입장을 시사했음. 이 신문은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관련, "각국이 찬성한 문건에는 '로켓'이라는 단어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저 '조선의 발사를 비난한다'는 구절만이 있다"며 "주권국가의 우주계획을 문제시한 전대미문의 성명은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반영한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음.

- 조선신보는 의장성명의 "더 이상 그 어떤 발사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 문구에 대해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할줄 모르는 조선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며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그 무슨 발사를 보류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를 통한 신뢰조성의 과정에만 가능하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을 거론했음. 이 신문은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가 이뤄질 경우 논점은 미사일이라는 개별의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파탄된 비핵화 과정을 되살려내는 것이 초미의 문제"라고 지적했음.
- 조선신보는 "조선이 실제로 핵억제력을 포기하는 단계에서는 정치·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유관국들간에 근본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음. 신문은 "조선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의장성명 채택 이후 미국도 겉으로는 조선과 협상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조·미직접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음. 이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당분간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당사자와 방관자가 구별될 수 밖에 없고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독재제를 강행한 일본은 의장성명채택을 조선의 위협을 강조하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는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고 있고 동족대결정권이 실책을 범했던 남조선도 북남대화를 추진할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조선신보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평화외교가 시도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국들은 조선반도의 안보논의에서 자기나라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려 할 것이지만 그 어떤 목표달성도 조선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음. 이 신문은 "한 발의 인공위성 발사로 조선은 외교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덧붙였음.

### ◎ '북한자유주간' 26일 워싱턴서 개최(4/26)

-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6자회담 교착 등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점을 고려해 이번 북한자유주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북한정권을 비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주최측은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5월2일에는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이슈화할 계획.

- 주최측은 또 북한 정치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영화제인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됐던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Kimjongilia)'를 상영할 예정. 김정일리아는 미국 여감독 낸시 하이킨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의 베일을 벗겨낸다는 취지에서 북한 수용소의 참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임. 이번 행사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성호 북한인권대사가 처음으로 참석하며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여성인권연대 등 탈북자 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7일 특별대표 취임 후 탈북자들과 처음으로 면담을 갖음.

### "北, 올해 식량 178만t 유입 필요"<FAO>(4/25)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수확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양곡년도(2008.11~2009.10) 상 식량 유입 필요량이 178만6천t에 달한다고 밝혔음. 25일 FAO 법인 문서 보관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4월 2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 양곡년도상 지난 3월말 현재 외부에서 들여온 식량은 모두 20만3천500t에 불과했음. 이중 상업적으로 수입한 양은 2만600t이고 외부에서 식량원조로 할당되거나 운송된 양은 18만2천900t이었음.
- 북한은 지난해 양곡년도상 상업적 수입 73만8천100t에 원조 76만200t으로 모두 149만8천300t을 외부로부터 들여왔음.
- 보고서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절실한 32개국 가운데 포함시키면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외부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4월부터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음.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식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했다며 "미국이 지난해 5월 이후 제공한 곡물은 17만t 정도"라고 말했음.
-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50만t을 지원키로 했으나 한국어 구사 모니터링 요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북한이 지난달 갑자기 지원을 거부해 현재 중단한 상태.

### "보즈워스, 탈북자 면담 예정"<VOA>(4/25)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특별대표 임명 후 처음으로 오는 27일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음.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27일 오후 국무부에서 '제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중인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탈북자들은 워싱턴에서 26일부터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고 보즈워스 특별대표 외에도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

### 北매체, 이란 美기자 실형 보도(4/25)

-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정식 재판 회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이란이 최근 재판에서 미국 기자에게 간첩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보도했음.
- 중앙방송은 이날 "이란이 18일 지난 1월에 체포된 미국 기자에게 8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했다"며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이란에서 기자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기자활동 자격을 박탈당한 그는 그 후에도 비법적으로 이란에 체류하면서 미국 정탐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감행했다 한다"고 논평없이 짤막하게 전했음.

### "국경없는 기자회, 北에 美기자 석방 청원"(4/25)

-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청원서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음.
-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지난 24일 북한이 억류중인 여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이르면 다음주중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음.
- 청원서에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언론인과 일반인 약1천5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국경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자들이 재판에 회부될 만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며 "더구나 북한의 사법제도는 불투명한데 여기자들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지도 우려된다"고 말했음.

### 北 "미국 기자들 재판 회부"(4/24)

-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힘.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죄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음.
- 앞서 지난달 31일 중앙통신은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음.
-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달 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 붙잡혀 억류됨. 북한이

이처럼 미국 여기자 2명을 비교적 신속하게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한 것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북미관계 악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행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 "절대 불참"과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및 경수로 발전소 자체건설 검토를 선언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구상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북 무시정책'을 시사하기도 함.
-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자극하는 탈북자 문제 취재를 위해 불법 입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여기자들 문제를 북미관계에서 쟁점화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북한이 힐러리 장관의 청문회 발언 하루만에 억류 여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들 여기자를 대미 압박의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북한은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연한 대이란 접근에도 불구하고 억류해온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를 재판정에 세워 미국을 위한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기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사를 평양에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향후 북미간 대화가 주목됨.

### 美의회에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제출(4/23)

- 미국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이 지난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RFA에 따르면 브라운백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한 '2009 북한 제재 법'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S.837)에서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테러단체에 불법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주장함.
- 법안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특사가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과 미국 정부간 모든 협상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의회에선 샘 브라운백 의원의 '북한 제재 법' 제출과 로스-레티넌 의원의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 제출 등 북한에 불리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음.

### ○ 클린턴 "예측못할 北행동에 굴복안돼"(4/2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또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거듭 밝힘.
- 그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힌 강력한 대북 의장성명의 만장일치 채택에 만족한다고 말함. 그는 "북한의 행동에 반대하는 안보리의 그런 강력한 지지가 결국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
- 앞서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 과제를 설명하는 모두발언에서 "역내 문제는 물론 금융위기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오랜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미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 대륙의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와 함께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는 수년 내에 절대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란 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이란과 논의하기를 더 원하고 있지만 매우 강한 제재의 기반도 함께 준비중에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의 이중 전략을 추진 중임을 전함.
- 그는 "우리의 노력이 거부당하거나 또는 그 과정이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것(매우 강한 제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함. 특히 이런 언급은 북한에 거듭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정권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가 강한 제재를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됨.
- 이밖에 그는 "알-카에다를 붕괴·소멸시키고 무찌르는 한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은신처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핵

심 목표"라고 강조함. 아울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폭력 포기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어떤 거래나 지원도 하지 않을 방침임을 확인했고, 쿠바에 대해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끌던 쿠바 정권이 종식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힘.

- 클린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 외교의 도전 과제로 기후 변화, 범죄 카르텔, 핵확산, 테러리즘, 빈곤, 질병 등을 나열하고, 지역적 문제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이란의 핵개발 추구, 중동 분쟁 등을 거론했으나 북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주목을 끌었음.

### "대북 '관리'보다 '적극개입'해야"<美전문가>(4/21)

- 미국 외교가에선 북한문제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북한문제를 소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차원의 대북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결과만 빚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21일 주장함.
-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북핵문제를 연구하는 위트 전 담당관은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 관리론'에 대해 "6자회담의 작은 진전에 따라 찔끔 찔끔 보상해주면서 6자회담 바깥에서 가끔 북미간 양자회담도 개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제재도 가하는 등의 양태로 결국 문제 해결의 부담을 중국에 지우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그는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등 주로 부시 정권 인사들이 북한 관리론를 펴며, 이에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주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같은 북한 관리론은 "일관된 전략이 결여"됐으며,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 미사일 또는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짐짓 축소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위트 전 담당은 지적함.
- '북한 관리론'의 맹점으로 그는 또 "김정일 이후 북한 정권이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개혁지향적일 수 있지만 거꾸로 유약하다는 외부 인식을 우려해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타협없이 고수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외부세계가) 김정일 정권을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북한 관리론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으며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려는 북한의 목표를 거드는 꼴이라고 그는 주장함. 이에 따라 그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 개

입정책을 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할지를 양자 택일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측이 아닌 확실성 위에서 대북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그러나 대북 적극 개입정책의 다른 한 측면으로 북한의 외교적 소모전과 일탈행동 가능성에 대비, 북한의 의무 불이행시 약속된 혜택을 철회하고 다자적 제재를 가하며 현실적인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에서 보듯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 개입정책만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와 잘 협의해 정치, 군사, 안보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 그러벨 전 美 상원의원 "대북 제재에 반대"(4/21)

-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바 있는 마이크 그러벨 전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21일 북한의 핵문제 및 로켓발사 등과 관련,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함. 그러벨 전 의원은 이날 부산대 특강에서 "제재조치는 지난 50년간 해봤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결과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는 이란과 쿠바 등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쏴 올리기를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이고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북한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우리도 북한을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서로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 "北-美 대화 가능성 적어"<뉴스위크>(4/20)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 가능성이 적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러시아판이 보도함. 20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핵 프로그램 중단 선언 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기대했지만, 미국이 이를 미뤘고 그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북한 군부가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함.
- 이번 로켓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데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성김 대북특사는 임명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북한을 알아가는 단계로 북

한을 무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호주 국립대 한국 전문가인 레오니드 페트로프 연구원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시기는 끝났다"면서 "북한과 미국 관계가 냉전시대로 되돌아갔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외화를 위해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며 "만일 미국이 보상해 준다면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단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음. 또 뉴스위크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자신들의 로켓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함.
- 미국의 민간 군사전문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박사는 "한반도에 여름까지 새로운 발사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함. 뉴스위크는 북한에서 우주 프로그램 담당자가 로켓 비행 분석 모임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았는데 이는 곧 이번 로켓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발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전함.
- 미국 전략정보 분석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의 로저 베이커 분석가는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뉴스위크는 북한은 냉전시대 이후 세상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 국제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3억 달러가 소요된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서도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함.
- 국제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시아 사무소 대니얼 핑스크톤 연구원은 "북한은 6자회담에 불화를 일으키면서 다시 또 6자회담 국가들을 교묘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함.
- 또 북한은 이번 행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식량부족을 잊게 해 줬고 한국보다 앞서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을 과시했으며 김 위원장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줌.
- 스트랫포의 베이커 분석가는 "북한이 '보아라. 우리가 해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고 이런 행동은 '무엇인가 살 수 없다면 만들어 내라'는 주체사상과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함.

## 다. 중·북 관계

### ○ "北 외무상, 베이징 방문"(4/25)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음. 신문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로켓 발사 이후의 6자회담 거부 표명, 핵개발 재개

등에 대해 중국측의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임. 그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

- 그는 지난 23일에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회담했음.
- 신문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을 북한이 거부한데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핵개발 재개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측은 박 외무상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쿠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장관급회의 참석차 25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음.

### <한국인 빠진 中선양 '큰손'은 北주재원>(4/20)

- 경제 위기에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귀국길에 오르거나 지갑을 닫으면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북한의 상사 주재원들이 한국인들을 대신해 '큰 손'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 교민들이 밀집해 있는 시타(西塔) 부근의 가구점에서는 최근 2만위안(390만원) 안팎의 가구세트를 별 망설임없이 사들이는 북한 주재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 북한 주재원들에게 한달간 5세트의 가구를 팔았다는 한국 가구 판매점은 "경제 위기 이후 매상의 대부분을 북한 주재원들이 올려주고 있다"며 "올 들어 판매한 가구 상당 부분을 북한사람들이 사갔다"고 말함. 그는 "한국인과 정서나 문화가 비슷한 북한 사람들이 한국식 가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마음에 들면 흥정도 별로 하지 않고 2만위안이나 3만위안의 비교적 고가 가구들을 거침없이 사들인다"고 설명함.
- 이들이 선호하는 가구는 세련된 한국식 장롱과 침대, 화장대 등이며 거실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탓인지 소파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시타 주변 상인들은 "주요 고객이었던 한국 교민이나 중국인들보다도 씀씀이가 더 크다"며 "한국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들었는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의아해함.
- 한 화장품 가게 주인은 "20위안짜리 향수를 꽤 비싸게 판 적이 있다"며 "마음에 들어 하기에 깎아줄 요량으로 가격을 높여불렀는데 거침없이 돈을 지불하더라"고 말함.
- 식당에서도 북한 주재원들은 '통 큰' 고객으로 환영받고 있음. 한국 돈 가치가 높았던 시절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자기과시적인 행태를 요즘은 북한 주재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임. 식당을 운영하는 한 교민은 "시킨 음식의 절반은 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중국인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시키고 주문도 고급 요리 위주로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고 북한 주재원이나 상사원들의 변화된 위상을 전함.

- 이들의 씀씀이가 커진 데 대해 북한 소식통들은 "상부에 일정액을 상납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말함. 수출이나 물품 구매를 위해 각급기관에서 중국에 파견된 북한 주재원들은 1인당 연간 5천-6천달러 규모의 정해진 '충성자금'만 내면 귀국할 때 가구며 가전제품의 반입이 허용되고 평양에서의 아파트 매입이나 돈을 쓰는 것도 묵인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임.
- 반면 충성자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심한 추궁과 함께 2-3년의 부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소환되기도 함. 한 소식통은 "선양에 파견나온 북한 주재원들은 광물 등 수물품 판매권이나 수입품 구매 계약권을 갖고 있어 그 역할이 크다"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적지않은 커미션을 챙길 수 있고 상납만 제대로 하면 이런 관행이 용인되는 것 같다"고 말함.

## 라. 일·북 관계

### ○ 日 민주당도 '적기지 공격력 보유론' 제기(4/25)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아사오 게이치로(淺尾慶一郎) 차기 내각 방위상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 "핵무기는 보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음.
- 그는 이날 TV아사히에 출연한 자리에서 "북한 노동 미사일이 전부 날아오면 격추할 수 없다. 미사일 방어는 가능하지 않다. 타격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며 이같이 말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공격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 차기 내각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당내 내각 명단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은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일본 내부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가 주변국의 경계심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임.

### ○ 北교육성, 日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비난(4/24)

- 북한 교육성은 24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심사에서 합격시킨 데 대해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음.
- 교육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통치야말로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국가범죄"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이 감히 저들의 침략과 식민

지통치가 '부드럽고 공평했다'느니,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느니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뻔뻔스럽고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말했음.

- 그는 "우리 민족은 천추만대를 두고 일본의 과거 죄악과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철저히 계산하고 천백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 반동들의 역사 왜곡망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해내외 온 겨레와 힘을 합쳐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북한, 日 과거사 조속 청산 촉구(4/23)

- 북한은 23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일제 식민지 과거사의 조속한 청산과 재일 교포들에 대한 탄압 및 차별 중지를 일본측에 촉구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본회의 연설을 통해 "지난 날 일부 나라들이 추구한 식민주의정책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가장 제도적이고 혹심한 형태이며 그 근저에는 자신은 '우월인종'이라는 인종주의 사상이 깔려 있었다"고 주장함.
- 또한 최 참사는 "과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의 군사적 강점하에서 민족적 탄압과 차별, 멸시를 당했다"고 말함. 최 참사는 일제하 군대 위안부와 징병·징용 등을 거론한 뒤, "이런 반인륜 범죄는 수십년이 지나고 세기가 바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그는 "일본은 오히려 식민지 과거를 정당화하고 민족말살정책의 흔적을 덮어버리고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고 특급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찬미하는 행위마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함.

### 日 나카가와 前재무상, 핵무장론 또 제기(4/20)

-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전 재무상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또 제기하고 나섬. 2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홋카이도(北海道) 오비히로(帶廣)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순 군사적으로 말하면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이라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말함.
- 이는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통신은 해석함.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자민당 정조회장을 역임하던 2006년 10월에도 "헌법에도 핵 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8년 1월에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한 바 있어서 나카가와 전 재무상의 이런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또 북한이 일본의 거의 전역을 사정으로 두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도 보유라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예고 없이 언제든 공격해 올 태세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며 "대항조치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그는 현 단계에서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핵무장 논의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한발 뺐음.
-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 및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자민당의 교과서 우파 모임인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의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는 극우파다. 그는 종종 대북 대화 노선을 비판하고 강경론을 주문했었음.

## 마. 러·북 관계

### ○ 러 대통령, 北김정일에 친서 보내(4/24)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음.
- 중앙통신은 2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음.
- 라브로프 장관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북한 것으로 미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라브로프 장관의 면담을 회피한 것은 북한이 이미 밝힌 대로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재가동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외부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간 23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러시아측은 "6자회담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우리(북)의 입장에 유의하였다"고 밝혀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했음을 시사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두 장관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정세'를 논의,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러시아측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음. 그는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이번 방북이 지난해 말 북러 외무성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올해 북러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60돌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교류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북·러 외교장관들은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 합의했다고 설명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24일 특별기편으로 서울을 방문해 1박2일간 체류하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임.

### 러 외무장관 "북핵 극적타결 기대안해"(4/23)

-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신속한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함. 러시아 이타르타스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23일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이같이 말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라브로프 장관은 또 "상황은 쉽지 않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이 과정을 재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각국은 각자 진실과 주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함.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 의무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함.
- 라브로브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시작했던 2005년 9월 합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함.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문재철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와 '2009~10년 문화 및 과학 교류 계획서'에 조인함.
- 그는 양국 정부 간 무역·경제협력위원회가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철도 건설을 비롯해 많은 유망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하산-라진 구간 철로 연결사업이 시작됐다"면서 이 사업은 "위기 속에서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함. 그는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인도주의 및 문화 협력 전망이 밝다"며 "우리는 그같은 협력 계획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음.

### 北-러, 외교장관 회담(4/23)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방북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양측은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 문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북한 정부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환영해 연회를 열었으며, 양측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양국간 친선협력을 강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밝힘.
- 이들 방송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러 외교장관이 "우리나라에서 민족사적 경사들이 연이어 겹쳐지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을 방문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조·러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공동문건들과 국가간 조약의 정신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함.
- 그는 또 "러시아 인민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나라의 전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도 "선군의 위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라브로프 장관은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러시아 연방의 확고한 입장은 2000년에 조인된 두 나라 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반영돼 있다"며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공동문건들은 러·조 관계발전을 추동했다"고 강조함.
-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데 대해 축하하고 "평양에 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도시의 면모가 일신"된데 대해 지적했다고 이들 방송은 덧붙였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해 양국 친선의 상징탑인 '해방탑'에 헌화하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해 방문록에 "탁월한 국가활동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께 경의를 드린다. 주석께서는 두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견결한 옹호자로서 러시아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라브로프 장관은 24일까지 평양에 머문 뒤 24일 특별기편으로 서울을 방문해 1박2일간 체류할 예정임. 이번 방북은 작년 10월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나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무상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을 설득했을 것으로 관측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방북하면 김 위원장을 면담하는 게 관례"라고 말해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을 예방할지도 관심사임.

### 北-러, 문화·과학 교류계획서 조인(4/23)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23일 평양에서 양국 간 2009~2010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와 관계부문 일꾼이, 러시아 측에서 이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일행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가함.

### 러-北-中 국제철도 올해 개통(4/22)

- 러시아와 북한,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22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극동 하바로프스크 현지 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공사(RZD) 자회사인 '제일화물'과 중국 현지 무역 회사가 최근 철도운송협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북한은 내달 서명할 예정임.
- 총연장 126km인 이 철도는 두만강 하류의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역을 거쳐 러시아 하산까지 연결됨. 이 국제철도는 1992년 4월 일시 개통돼 화물 수송에 이용됐으나 여러 이유로 그해 바로 열차 운행이 중단됨.

- 이후 3국은 2007년 12월 투먼시 세관에서 '철도화물운송 회의'를 열어 철도부문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고 철도 개통에 따르는 국제 무역 화물운송 조건, 운송물량, 화물 인계인수, 화물열차 사용료 정산 및 결산, 운송요금 등에 합의했었음.
- 제일화물 관계자는 "러시아 화물 열차가 좁은 북한 철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와 시설을 중국 측이 이미 북한에 보냈다"라며 "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산 시멘트, 철근, 생필품이 수출될 것"이라고 밝힘.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이 협정에 서명하면 중국은 곧바로 북한 구간 철로를 재건설할 것"이라면서 "공사가 끝나면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하루 약 500~700개의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바. 기타

**北주재 유럽국 대사 '태양절' 행사 대거불참(4/22)**

-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7개 유럽 국가의 대사들 중 대부분이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22일 밝힘. 이런 유럽 외교관들의 움직임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함.
- 북한에서 '태양절'로 불리는 김 주석의 생일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휴일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지난 5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랐음.
- 하지만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반응에 북핵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감시단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함. 외교 소식통들은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을 때도 유럽 국가 대사들이 이번과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북한은 그에 대해 몇 주 동안 해당 국가와의 외교 접촉을 중단하는 형식의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전함.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영국과 불가리아, 체코,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와 스웨덴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한·미, 軍고위급회담..美2사단 이전 조율(4/23)**

-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 오전 10시 용산 연합사령부 회의실에서 한·미 군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동두천

과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의 평택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을 집중 조율함.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미2사단의 이전 시기와 비용 문제 등을 막판 조율함.

- 이전시기와 관련, 2015년을 주장하는 한측과 2016년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의 입장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임. 다만 용산기지는 2014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입장 조율을 사실상 끝낸 것으로 전해짐.
-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한측은 순수 이전비로 4조2천억원~4조8천억원(사업지원비 3조원 별도) 사이에서 부담을 하고 미측은 6조8천억원 가량을 지불키로 하는 등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미는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이전문제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정부, PSI연기 美 등 관련국에 설명(4/20)

- 정부가 최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시기가 늦어지는 배경 등을 미국 등 관련국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20일 확인됨. 정부 당국자는 "당초 정부가 미국 등 관련국에 알렸던 것보다 PSI 전면 참여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관련국들에 저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관련국들에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변함이 없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저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다만 전면 참여 발표시기는 제반 요인들을 감안,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PS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PSI 전면참여 여부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말함.
- 정부가 PSI 전면참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미국 등 관련국들에 발빠르게 설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나. 한·중 관계

### ○ 해군총장 "해양위협에 국가간 협력필요"(4/21)

-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초국가적 해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정 총장은 이날 칭다오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 고위급 심포지엄 특별연설을 통해 그같이 강조한 뒤 "해양위협에 대한 감시체계와 실시간 해양정보 상호

교환체계 등을 공동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해군이 전함.

- 정 총장은 "해양교역의 75%와 세계 석유 소비량의 50% 이상이 국제해협이나 운하와 같은 해상 병목지점(초크포인트)을 통과하고 있어 해상테러나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해상 위협세력들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될 때 인류사회는 재앙적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함.
- 그는 "한국 해군도 지난 3월 소말리아 근해 해적퇴치를 위해 함정 1척을 파견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해군은 초국가적 해양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정 총장은 오는 23일 중국 해군 북해함대사령부가 있는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석한 뒤 귀국함. 해상사열에는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2천t급)과 최신예 구축함인 강감찬함(4천500t급)을 포함해 14개국 군함 21척이 참가함.

## 다. 한·일 관계

### ◎ 한·일 국방 "北 도발행동 안보 심각위협"(4/23)

-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3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한반도 안보와 지역안정,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양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방위성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지역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그같이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이익을 위해 한·일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일 국방교류의 기본 틀인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이하 의향서)에 서명함. 의향서는 "양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국방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데 유의하고 양국의 양호한 관계가 상호 이해, 신뢰관계 및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함을 인식한다"고 적시함.
- 또 의향서는 양국 국방교류 범위를 ▲국방 장·차관, 합참의장, 각 군총장 등 고위급과 실무급 인사 교류 ▲교육·연구기관 교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공동훈련 정례화 ▲양측 부대간 교류와 훈련 참관, 함정과 항공기 상호방문 ▲국제평화유지활동과 해외 긴급구호활동과 관련한 협력으로 명시함. 이 의향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쌍방의 서면 동의로 개정 또는 폐지됨.
- 국방부 관계자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양국 국방교류의 기본 대강(大綱)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향서에 교류범위를 명시했지만 지금도 모두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함. 회담에서 이 장관은 한미동맹 현안을, 하마다 방위상은 주일미군 재편 진행과정을 각각 설명한 뒤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

작전 등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함.

-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장관은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헌화에 유감표명(4/21)

- 정부는 일본 아소 다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화분을 헌납한데 대해 21일 강한 유감을 표명함.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아소 다로 총리가 공물(供物)을 보낸데 대해 역시인식 정립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아소 총리는 21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야스쿠니 춘계대제에 맞춰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화분을 공물로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행사에 공물을 보내기는 2007년 4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이후 처음임.

## 라. 한·러 관계

### ○ 러'외무 "6자, 각각 의무 이행해야"(4/24)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한·러 외무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목표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를 모든 관련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꼭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음.
- 방한에 앞서 북한을 1박2일간 방문했던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은 당장은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없다"면서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뒤 북한측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음.
-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이행과 관련,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합의내용을 보면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 데 이런 사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군사적 동맹 등 여러가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면서 "이웃 나라에서 앞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 일본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음.

### 러'외무 "억류문제 조속히 해결돼야"(4/24)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 사건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한·러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음.
- 그는 그러나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데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비롯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와 상관없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이런 인도주의적 문제를 갖고 다른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의 조건으로 삼으면 긴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와 6자회담 재개문제를 서로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음.

### 러'외무 "北에 위성발사 지원 제안"(4/24)

- 방한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북한에 러시아의 기술로 북한의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을 방문, (북한측 인사들과) 면담할 때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측도 앞으로 우리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러'외무 "대북제재 비건설적"(4/24)

- 방한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제재는 비건설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음.

### 한·러 외교장관, 6자 재개방안 논의(4/2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4일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평양방문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음.
-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제재리스트와 관련한 협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됨. 또 '6자회담 거부'를 공언하고 있는 북한을 다시 대화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임.

### ○ 러'외교장관, 금주 남북 동시방문(4/21)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 주 평양과 서울을 잇따라 방문함.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북핵 6자회담 관련국의 고위인사가 처음으로 북한을 찾는 것으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브로프 장관은 오는 24~25일 서울을 찾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23~24일 평양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것으로 21일 알려짐. 이번 방북은 작년 10월 박의춘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에서 박 외무상을 만날 예정임.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24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이동, 이날 저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양방문 결과를 유 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됨. 라브로프 장관은 25일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한국을 떠날 계획임.

## 마. 미·중 관계

### ○ 美해군사령관 "中항모, 주변국 우려 야기"(4/22)

- 게리 러프헤드 미 해군 작전사령관은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지적함. 중국을 방문 중인 러프헤드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면 "역내 일부 국가들과 해군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러프헤드 사령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 기념 해상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으며,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과 회담을 가짐. 온라인 군사전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org)의 군사 전문가 존 파이크도 앞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인도 등 역내 군사강국들과 해상에서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는 항공모함이 중국의 해상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딩이핑(丁一平) 중국 해군 부사령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함. 딩 부사령관은 "중국 해군은 전 세계와 지역, 해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계속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함.
- 우 사령관도 전 세계 각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비재래식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우 사령관은 이날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앞서 지난 13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해군의 장거리 작전을 위해 대

형수면전투함정 등 차세대 함정과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우 사령관은 대형수면전투함정이 어떤 군함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항공모함과 대형 수송선을 망라하는 개념인 것으로 군사 소식통들은 분석함.

## 바. 미·러 관계

### ○ 러' 총참모장 "'상당량' 핵무기 감축 가능"(4/23)

- 24일 러시아와 미국 간 전략무기감축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이 상당량의 핵무기 감축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23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니콜라이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러시아는 '상당량'의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이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탄두와 발사체 수 모두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건이 맞기만 하면 러시아는 2002년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명시된 것보다 무기수를 더 줄일 수도 있다"고 강조함.
- 러시아와 미국 양국은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오는 12월 시효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위한 첫 실무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임. 양국은 감축 대상 무기와 그 숫자, 이후 검증과 사찰 방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는 핵탄두뿐 아니라 최고 10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등 발사 수단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2002년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SORT에서 핵무기 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1천50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양국 모두 시효 만료 전 성과물을 낸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이견이 클 경우 예상보다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임. 러시아 외무부 이고르 네베로프 북미국장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달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까지 실무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양국 정상은 지난 1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START-1 후속 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며 오는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까지 1차 초안을 만들기로 함.

### ○ 러', 美 MD 대항 미사일 배치 또 거론(4/22)

- 오는 24일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무기 감축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 관리가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에 대항한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들고 나와 논

란이 되고 있음.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1일 인테르팍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MD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힘.

- 그는 "MD 계획이 없다면 미사일 배치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미 대선이 끝난 다음 날 MD 계획에 맞서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500km 사거리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폴란드 전역은 물론 독일과 체코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됨.
-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MD를 철회하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제로옵션'을 제안했으며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에 양국 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자 러시아군 관계자의 입을 통해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가 다시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오는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임.
- 양국 정상은 지난 1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오는 12월 시효 만료되는 START-1 후속 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오는 7월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까지 1차 초안을 만들기로 함. 전문가들은 MD 계획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러시아가 MD 문제를 이번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리아브코프 차관이 MD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협상을 앞둔 기선 제압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임. 그가 이날 "우리는 전략 무기를 한꺼번에 줄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됨.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MD 계획의 실효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음.

## 사. 중·일 관계

### ○ "중-일 해군교류에 문제없다"<주일 中대사>(4/24)

- 홍콩을 방문 중인 추이톈카이(崔天凱) 주일 중국대사는 일본이 23일 칭다오(青島)에서 거행된 중국 해군의 해상열병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 중·일 양국 해군은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추이톈카이 대사는 이날 홍콩언론계 고위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2007년에는 중국 함대가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 군함이 이에 대한 답방으로 작년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을 방문하는 등 양국 해군

은 교류가 잦다며 이같이 말함.

- 일본 군함의 해상열병식 불참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내각총리대신'이란 이름으로 화분을 보내 공물을 봉납한 것과 관련, 양국 관계가 불편해진 것과 때를 같이해 주목을 끌었음.
- 추이톈카이 대사는 중·일 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어려운 외교관계의 하나라며 과거사 문제 등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5월에 있었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상호 신뢰가 깊어지고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함.

### ○ 中, 日총리 야스쿠니 헌화에 반발(4/21)

- 중국은 21일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화분을 헌납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처신하라"며 반발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제사에 화분을 보낸 것과 관련, "일본이 양국간 정치적 장애의 극복과 우호·협력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을 실제로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적절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촉구함. 장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는 중·일 관계에서 중요하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말함.

## 아. 중·러 관계

### ○ 中 국방부장, 러시아 공식 방문(4/20)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오는 26~30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에 나섬. 20일 베이징의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량 부장은 오는 27~28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까지 러시아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함.
- 량 부장은 SCO 국방장관과 별도로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 군사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이 소식통은 "이번 량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간 국방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분석함.
-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 타지키스탄에서 SCO 병력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합동군사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등 최근 들어 군사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 러시아는 오는 23일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에서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군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열병식에도 군함을 파견한 바 있음.

## 자. 기타

### 美국무부, 대외원조사업 개혁 추진(4/23)

- 미국 국무부는 대외원조 사업이 외교전략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외원조 사업 전반에 걸친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전함.
- 클린턴 장관은 대(對)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관한 데이비드 스코트 하원의원(델라웨어, 민주)의 질의에 대해 "원조의 상당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잘 모른다"면서 "원조를 집행하는 계약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시인함. 클린턴 장관은 대외원조 자금의 절반 정도가 원조대상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십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가 아프리카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이어 "우리는 대외원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때가 됐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미국 회계감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3년전부터 추진돼온 국무부의 대외원조 사업 개혁조치가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고도의 외교전략 및 목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추진되는게 아니라 별개로 추진되는 문제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함. 국무부의 대외원조정책 개혁은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주도아래 추진된 것으로 국무부 및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189억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사업을 단일화했지만 18개 타부처의 대외원조 사업은 통합하는데 실패함.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미국이 외국에 제공하는 원조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담고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 <中 첫 공개 핵잠수함 알고보니 구형>(4/23)

- 중국은 23일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해상 열병식을 갖고 자국 기술로 개발한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함. 중국 해군은 이날 오후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항에서 전 세계 14개국 군함 21척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해상 열병식에서 자국 기술의 핵잠수함 2척을 공개함.
- 하지만, 핵잠수함은 구형 잠수함인 것으로 드러남. 중국 언론과 해외 언론들은 각국 함대가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최신예 핵잠수함이 공개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었음. 이날 공개된 핵잠수함 2종류는 모두 1980년대 초에 진수돼 이미 20여년간 현장에서 작전 업무를 수행한 구형 핵잠수함인 것으로 밝혀짐. 중국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살펴본 결과 이번에 공개된 '창정(長征)

6호'는 1970년 9월 랴오닝(遼寧)성 조선소가 개발에 착수해 1981년 초에 진수된 '샤(夏)급'(092형) 잠수함으로, 1983년 8월부터 해군 작전에 투입됨. 전장 120m, 폭 10m에 배수량 8천t급의 이 핵잠수함은 사거리 2천700㎞의 탄도미사일 12기와 어뢰발사관 6기가 장착돼 있음. 1988년 9월에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으며 1995년 말에 사거리 8천㎞의 '쥐랑(巨浪)-2호'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됐음.

- 함께 공개된 '창정 3호'는 창정 6호보다 규모가 작은 전장 108m, 폭 11m에 배수량 5천t급으로 중국에서 '한(漢)급'(091형)으로 분류됨. 이 핵잠수함 역시 1983년 진수돼 작전을 수행하면서 수차례 개조 과정을 거쳤음. 이날 해상 열병식에는 두 종류의 핵잠수함 외에 '창청(長城) 218호'와 '창청 177호' 등 디젤추진 잠수함 2척도 참여함.
- 중국은 현재 핵잠수함 8척,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문가들은 각국의 해군 총사령관 등 군사전문가와 각국 언론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최신예 잠수함을 공개할 경우 자국의 기술과 전력 노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형 대신 구형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럼에도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구축함, 호위함 등 25척의 첨단 군함과 젠(殲) 시리즈 등 31대의 첨단 전투기를 동원해 '대양해군'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함.

### ○ 중국, 호주 우라늄 확보 나선다(4/22)

- 중국이 에너지자원 확보 차원에서 호주의 우라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중국은 대대적인 원전산업 확충을 위해 우라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호주가 우라늄을 공급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십억호주달러(수조원 상당)를 책정해 두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베이징발로 22일 보도함. 중국 관리들은 올해 5개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우라늄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힘. 중국은 이미 11개의 핵발전소를 완공해 가동 중이며 24개를 건설하고 있음.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원전산업 확충에 우라늄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의 우라늄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함. 중국의 한 관리는 "향후 20년에서 30년 사이 필요한 전력공급에 원전 건설이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중국에는 우라늄이 부족하다"며 "호주의 우라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 "中경제 올해 8.3% 성장"(4/20)

-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3%로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8%를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CASS)이 예측함. 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의 왕퉁싼(汪同三) 소장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8% 성장이라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함.

- 또 비록 수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역 상대국에서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환율 조건도 유리해짐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임. 왕 소장은 올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3%, 2.4% 감소, 2천8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낼 것이라고 밝힘.
- 이 같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이 각각 내놓은 6~7%, 6.5%의 성장 전망치보다 훨씬 낙관적인 것으로, 최근 중국 경제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바닥을 치고 되살아나고 있다는 견해와 맥락을 같이함.

### ○ 中-佛 봄바람.."사르코지 후주석 초청"(4/21)

- 티베트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관계 복원에 합의한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잇단 봄바람이 불고 있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안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프랑스에 초청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0일 프랑스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전함. 사르코지 대통령의 후 주석 초청은 두 사람이 런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화해한 지 3주만에 나온 것임. 이와 관련,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베르나르 아쿠아예 프랑스 하원의장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후 주석 초청장을 중국의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밝힘.
- 아쿠아예 의장은 양국관계가 경색된 이래 중국을 방문한 첫번째 고위인사로 기록됨. 중국 정부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작년 12월 폴란드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회동한 데 대한 항의로 프랑스와의 접촉을 중단하고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면서 프랑스를 제외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함.
-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두 정상은 지난 1일 전격 회동한 뒤 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고위급 접촉과 전략적 대화를 재개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로써 사르코지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회동과 위안밍위안((圓明園)의 쥐머리, 토끼머리 청동상의 크리스티 경매로 악화됐던 양국 관계가 복원된 바 있음.

### ○ 클린턴, 이란에 美여기자 석방 촉구(4/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간첩혐의로 8년형이 선고된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의 신속한 석방을 이란 정부에 촉구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막심 베르하겐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사베리 기자에 대한 재판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사베리 기자의 사건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인 과정에 의해 처리돼 왔다"면서 "이란 당국에 의해 사베리 기자가 가능한 한 빨리 석방돼 귀국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함.
- 그는 또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 공정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전날 이례적으로 사베리 기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베리 기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사베리 기자는 지난 1월 이란 당국에 기자 신분증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이후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이란 법원은 이를 인정해 8년형을 선고함.

**[참고 1] 〈한러 외교장관 회견 일문일답〉 (4/24,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4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고 라브로프 장관은 "우선적 목표는 6자회담 재개"라며 "관련국들은 9.19 공동성명에 나와있는 임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서울에 도착하기 앞서 1박2일 간 평양을 방문했다.
이날 회견 문답과정에서 모 방송국이 생방송으로 회견내용을 소개하자 라브로프 장관이 당황해하며 우리측에 제지를 요청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다음은 양 장관과 일문일답.

--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나.

▲ (라브로프 장관) 우리는 면담을 따로 요청하는 관례가 없다. 이번에 방문할 때에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

--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소개해달라.

▲ (라브로프) 오늘 당장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는 북측에 어떻게 이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리 입장을 밝혔고 또 설득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관련국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관련된 조건들은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특히 평양에서 회담 뒤 북측이 9.19공동성명이 정당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 가스를 한국에 들여오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했나.

▲ (라브로프) 가스 문제는 북한 등 모든 관련국들이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동북아에서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 평양에서 북한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문제를 거론했나.

▲ (라브로프) 러시아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여러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양에서 면담했을 때에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북측이 앞으로 우리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7월말에 한국도 위성발사계획이 있는데 양국의 우주개발분야 협력 상황을 소개해달라.

▲ (유명환 장관) 그간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금년 7월 말로 예정된 발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더욱 더 양국간에 우주분야 기초기술개발과 전문가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라브로프) 러시아는 한국과의 최첨단 기술분야를 비롯한 여러 경제분야의 협력을 계속하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 정부는 러시아측에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상태와 관련해 북측에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안다. 이와 관련한 답을 들었나.

▲ (유명환) 라브로브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셨다.

▲ (라브로프) 이 문제가 되도록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6자회담 재개 문제와 서로 연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6자회담 재개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도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갖고 다른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과정에 조건으로 갖고 하면 현재 해결돼야 하는 여러 긴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비롯한 여러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다른 문제와 상관없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북한에서 '러시아는 유엔 차원의 제재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는데 러시아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라브로프) 제재는 비건설적인 것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을 보면 제재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다. 지금 뉴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제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의논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해야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 (라브로프)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합의내용을 보면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보상조치로 에너지 공급을 해야되는데 많은 관련국들이 이런 사안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transil@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24/0503000000AKR20090424215000043.HTML